

“도서관은 인류 지식발전의 주춧돌”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 열려... 경주 교육문화회관서 3일간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두영)는 9월 24일부터 3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했다. 신일희 총장(계명대)은 기조연설을 통해 시대적 사명에 복무했던 도서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는 것은 인류발전을 위해 수임받은 숭고한 사명”이라며 도서관 대중화를 위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망했다.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세미나 등 모두 26편의 강연이 이뤄진 가운데 김포옥 교수가 주제발표한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의식과 교육방향>은 앙케트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실질적 운영자인 도서관장의 '전문가 의식'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포옥 교수는 전국 도서관장 329명 중에 설문에 응한 188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근무경위·근무연수·사서교육이수 여부 등을 분석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도서관장의 34%가 사서자격증조차 없는 비전문가라는 점, 도서관장을 전문직으로 평가한 사람이 115명(61.2%)에 불과한 점 등이다. '도서관 일을 특별히 지망하지 않았다'는 관장이 44%나 되어 애초부터 '전문가 의식'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추론도 도출했다. 김교수는 “도서관장의 전문가 의식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주제 '도서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한성택 교수(숭의여대) 등 3인은 21세기에 맞는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고하고 도서관의 유기적 역할을 모색했다. 제2주제 '봉사'에 대해 채윤정 사서(정독도서관) 등 4인은 도서관의 서비스 실태와 향후 방향성을 논했으며, 제3주제 '운영'은 김포옥 교수(전북대) 등 4인이 도서관 운영의 현주소를 각각의 입장에서 조명했다. 마지막 주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김종성 사서(부산대) 등 2인이 도서관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 학교도서관의 발전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 논문 가운데 3편을 요약해 실는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검토해야

한성택 — 도서관 문제는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21세기, 즉 후기산업 사회인 정보화사회에서 복지 문화 국가는 지식정보에 의존하여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IMF 이후 정부의 모든 시책이 경제회복에 집중되어 있고, 그 영향이 도서관 문제까지 미쳐 정책방향이 크게 잘못 설정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법 제정 당시(63. 10. 28)부터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던 도서관정책 부재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헌정보는 국가발전의 자원이다. 경제성장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학문과 과학기술의 증진에 유일한 매개체이며, 문화발전의 중심이다. 이와 같은 문헌정보의 중요성은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국제간의 정보 흐름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여

러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는 국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표준화규격의 적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ISBN·ISSN제도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도상국은 아직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도서관정책이 확고히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획요소는 도서관 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동일하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향설정이 가능하다. 즉 정부내의 도서관 정책담당기구의 설치, 정보처리기관의 협동망 형성, 자료등록의 국가제도 확립, 컴퓨터 기법의 도입과 활용, 표준화, 각종 정보처리기관의 특성, 전문직 단체의 육성과 활용, 자격제도의 확립과 교육제도의 확립,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한성택 교수.



김종성씨.

의 기본 방향 등이다.

우리나라에도 도서관 제도의 기본법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있다. 법의 체계와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공론화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확립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도서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기구 설치, 결정기구를 자문하는 보조기구 설치, 집행기구 조직 등을 해야 한다.

문헌정보가 국가의 경제·문화적 발전자원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인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배려가 없다. 정부는 학술진흥과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과학기술 개발과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주도하의 도서관 육성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정책의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내용을 현재 통합법 체제에서 독립법 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기본법(현행법체제 유지)과 공공도서관법, 학교도서관법 등을 새로 제정하여 독립법 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 도서관 운동을 제도화해야

김종성 — 우리 사회의 주요한 테마 중 하

나인 교육개혁의 조류가 거센 지금, 학교도서관 사업확대에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내용이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변화를 대표하는 열린교육 역시 교수 학습방법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교육개혁의 실천은 일선 교사가 요구하는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교육자료의 확보에 달려 있다.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흐름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은 빠른 조류를 타게 될 것이다. 현단계 학교도서관 운동은 우리가 서 있는 출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힘을 최대한 모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운동은 현실의 토대 위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운동의 에너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괄적인 통계는 표피적이고 형식적이다. 통계만 믿으면 도서관 수와 장서 수 등이 제법 그럴듯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계수치의 허구성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어떤 면에서는 통계수치의 그럴듯함이 학교도서관의 실체를 적절하게 위장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위



채윤정씨.



한국도서관대회 개회식.

해 학교도서관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조사항목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장서 수를 비롯하여 장서의 주제별 현황, 그리고 장서의 발행연도별 현황까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운동을 이끌어갈 주체 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누가 주체세력으로 결집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학교도서관 현장 사서교사이다. 현장 사서교사의 테두리 안에는 학교도서관에 있는 사서 그룹도 포함되어야 한다.

운동세력을 조직화하는 데 중요한 전략 중 하나를 조직의 단위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현황이나 지역별 편중현상, 그리고 학교별 격차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지역단위의 운동협의체를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200명도 되지 않는 사서 대부분이 서울과 광주 전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것도 대체로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현실적으로 사서교사들의 조직화가 가능한 지역에서 운동력을 모으고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일부 학교도서관은 전통적 틀을 갖추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두

적 사서교사 조직은 운동의 지향을 개체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한 기술이나 이론에 맞추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이 명실상부한 교육지원 시스템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몽하고 홍보하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존재 의의는 교육의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지형은 변화하는 흐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현장에 도서관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의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교장·교감과 주요 고객이면서 홍보자인 교사들의 의식 속에 먼저 학교도서관이 뿌리내려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동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규는 교육부 소관 법규인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등에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도서관 운동세력은 지방 교육행정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개혁 운동의 입지 확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몽하고 교육개혁의 전제 조건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절실히 요망된다. 열린교육, 교육정보화, 대입시험제도 개선 등의 교육개혁적 방안들은 하나같이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

자료센터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교육개혁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학교도서관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영역에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전교조'와 같은 교원운동 단체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같은 시민운동 단체의 운동 방향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전을 위해 교육운동 단체와의 연대와 협조가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비참할 지경이다. 그러나 희망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사람을 기르는 사업에서 학교도서관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신념과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희미하던 희망을 더욱 더 선명하게 한다.

고통 함께 나누는 '열린 도서관' 지향

채윤정 —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이라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주민의 생활에 있어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등 점차 능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련의 방안으로 IMF시대를 맞이하여 정독도서관은 '98년 3월 취업정보도우방'을 개설, 정보서비스에 들어갔다. 갈수록 심화되는 대량 실업사태 속에 개개인이 취업에 대한 의지

를 갖고 도서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코너 '도우방'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7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일반도서 147권, 간행물 1백여종, 컴퓨터 2대 등을 비치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총 8,508명이 이용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77%를 차지했고,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경력별로는 경력자가 절반가량 차지했고, 직종별로는 전문직·생산직 순으로 이용했다. 정보화에 대응한 환경조성을 위해 단말기 배치와 시스템의 운용 등 모든 사람이 혼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이상과 현실의 괴리, 표현방법의 미숙, 소극적 태도, 주체의식의 부재 등이 나타났다. 외부환경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부정확성, 미확인 기업정보의 범람 및 규제 부재, 공급과잉에서 오는 폐해, 기관의 연계성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내부환경으로는 범람하는 정보의 선택·수집·가공의 한계, 시스템 보완 및 개선의 미비, 사서 인식의 형식화 등이 문제였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와 원활하게 대화함으로써 직업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자료 및 시설제공이 여러 계층의 이용자에게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연계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용자가 찾지 않은 도서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열린 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취업정보도우방'과 같은 시설을 개설해야 한다. 더욱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공공도서관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길이다. — 경주·오완진 기자